

전남도, 국내 지자체 최초 '구글' 과 협력사업 추진

본사 차원 업무협약...2년 효력
관광산업 진흥·지역 기업 육성
구글맵에 관광지·업체 등 소개
"데이터센터·클라우드도 추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도청 접견실에서 구글(Google) 윌슨 화이트 부사장과 전남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Google)과 관광산업, 지역 스타트업 육성사업 등의 협력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22일 도청에서 구글과 전남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스타트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구글 본사 차원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한 것은 전남도가 처음이다. 협약서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이 서명했으며 앞으로 2년간 효력이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구글은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1단계 협력사업으로, 구글 지도를 활용해 전남 관광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모 등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발해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글 지도에 업체 정보를 등록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필'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설명회도 개최한다.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연락처, 사용자 리뷰 등 구글 지도에 등록된 정보는 전 세계 구글 사용자들에게 70여 언어로 번역돼 보여지게 된다. 이를 통해 전남에 방문하는 해외 사용자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숙소, 맛집 정보 등을 현지 언어로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업체

는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촉진 협력사업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해 창업 관련 특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구글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 방안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로 추진할 2단계 협력사업으로

는 전남의 관광·문화·역사 자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구글 플랫폼에 게시하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구글 지도에 전남의 관광 명소를 표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전 세계 220개 이상의 국가와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 70개 이상의 언어로 지원되는 구글 지도 등 구글의 디지털 도구를 통해 외국인 관

객에게 전남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또 많은 이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Google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손쉽게 도달하고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전남도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많은 잠재력을 가진 전남의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기업이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과 국내 지자체 최초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외국인 관광객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남이 세계적으로 많은 분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기업도 지원과 구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IT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구글과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등에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전남도, 올해 공사·용역·물품 1조1757억 발주

상반기 73% 8555억원 발주

전남도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조원 규모의 2025년 공사·용역·물품의 사업 발주계획을 도 누리집(회계과 자료실)과 조달청(나라장터)에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전남도 발주 예정 사업 규모는 공사 9945억원, 용역 1507억원, 물품 305억원으로 총 941건 1조175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9130억원보다 2627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구암천 등 하천재해예방 사업 19건 5244억원 △함평염다천지구 등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건 762억원 △광양청 세풍산단 조성사업 1144

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발주하는 사업의 73%인 8555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22개 시군의 사업 발주 규모는 지난해(3조44억원)보다 2427억원 증가한 1만 1964건 3조2471억원이다. 시군 발주계획 역시 시군 자체적으로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고미경 전남도자치행정국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도내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도내업체 참여제도 적극 활용과 상반기 조기 발주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서부지법 폭동' 56명 구속... 침입 2명은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있다" 발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적용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58명 중 56명이 구속됐다. 기각된 2명은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한 이들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2명, 공용

물건손상 혐의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19일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청사를 침입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구속심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가운데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수 있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홍다선, 강영기 판사 심리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90여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 66명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된 피의자 56명과 지난 20일 구속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2명 등 58명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당초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도 지난 20일 긴급체포해 전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 침입 사실을 자수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더중앙플러스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확인해주세요

인사이트를 더하다

사실에 통찰을, 정보에 취향을 더했습니다.
뉴스 위에 독자를 더하는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The JoongAng Plus에서 만나보세요.

The JoongAng Plus

새로운 인사이트

큐레이션

독창적인 관점